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기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 ‘부의 세습’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기업 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기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기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기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라며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계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 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 8조 돌파… 정교한 과세 필요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

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 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종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이어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민병덕 의원은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꼼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어이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올해 64.9조원… 가상자산 급락 영향

올해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으나, 신고금액은 121.5조원(65.2%)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된 특정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30.8조원 신고됐던 가상자산 계좌는 올해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92%나 줄었다.

가상자산계좌와 이외 나머지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신고액의 54.5조원으로 지난해(55.6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할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